

특허청24시

한·유럽특허청(EPO), 「특허정보협력협정」체결

- 특허전산망 상호연결 및 특허정보의 공동활용 추진 -

□ 김광립(金光琳) 특허청장과 Ingo Kober(잉고 코우베) 유럽특허청장은

- 4. 25(목) 정부대전청사에서 한·유럽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특허정보 및 전산분야에 대한 「한·유럽 특허청 정보협력협정」을 체결하였음

□ 양청은 한국과 유럽지역민들의 특허정보이용을 활성화하고 양청간 특허정보·자료의 신속한 교류 및 활용을 통한 특허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 특허전산망을 상호 연결하고 기술관련 각종 특허 및 비특허 문헌 자료를 교환하는 등 특허정보분야에서 공동협력기로 하였음

□ 이번 합의로 한국 특허청과 국내 기술정보이용자들은

- 세계최대의 특허정보기구인 유럽특허청 (유럽지역 20개국 가입, 1억건의 특허정보 소장) 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술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

□ 이번 협정체결은

- 최근 한국의 국제출원규모의 증가로 한국특허청 보유 기술정보의 국제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세계최초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발('99년), 운영되고 있는 한국특허청전산망 (KIPONET)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 유럽특허청이, 한·유럽간 체계적인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전산 인프라구축을 희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장기적으로는 한국특허청 전산망을 아시아지역의 특허정보교류기지 (特許情報交流基地)로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임

□ 양청은 우선 제1차 3개년 계획(2002-2004)으로

- 유럽지역과 한국내 유통되고 있는 각종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간에 운영되고 있는 3국 전산망(TRINET)에 한국특허청의 전산망을 연결, 기술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추진하며,
- CD-ROM, 정기간행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양청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정보 데이터를 유럽과 한국민, 아시아 지역 이용자들에게 적극 보급키로 하였음

□ 이 밖에도 양청은

- 특허행정의 정보화시스템 개발, 특허정보검색 시스템 개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특허전산 표준화 작업과정에서 긴밀히 협력기로 하였음

특허청24시

한국 특허넷시스템, 미·일·유럽특허청 3극망에 연결

- 광범위한 최신의 세계 특허정보 및 데이터 활용에 획기적 전기마련

□ 한국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미·일·유럽특허청 3극망에 네트워크 연결, 5월부터 특허정보 및 데이터의 상호 온라인 교환 개시

- 2002년 5월부터 특허청의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 (KIPOnet System)이 3극망(TRINET: 미국·일본·유럽특허청 간 전용 네트워크)에 연결됨에 따라, 세계 3대 특허청과 네트워크를 통해 특허정보 및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음
※ 3극망(TRINET: Trilateral Network) : 세계 3대 특허청인 미국특허청·일본특허청·유럽특허청 간에 '98년 11월에 구축된 3극 전용 네트워크

〈설치목적〉

- 3극 특허청 간 특허데이터 및 정보의 온라인 교환
- 각국의 특허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자료를 직접 검색·조회
- 3극망을 통한 3극 특허청 간 긴밀한 기술협력 도모

○ 추진경위

- 한·미, 한·일, 한·유럽특허청과의 지속적인 양자협력의 결과, 2001년 6월 '3극(미·일·유럽)특허청 기술회의'에서 한국특허청과 3극망 연결 합의
- 2002년 4월 현재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최종 테스트 완료

□ 3극망 연결에 따라 광범위한 최신의 특허데이터를 직접 검색·조회

- 3극특허청 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계각국의 특허 데이터 조회 가능

□ 세계 3대 특허청과 특허정보 및 데이터의 온라인 교환

- 그동안 일본특허청과 CD-ROM으로 교환하여 온 우선권증명서류 전자데이터를, 올 5월 중으로 삼극망을 통한 교환 합의

- 연내에 미국특허청 및 유럽특허청과도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예정

□ 향후 한국특허청과 3극특허청 간에, 검색데이터·심사결과 등 교환가능한 전자데이터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 특허넷시스템과 3극망 간의 네트워크 연결은 한국 특허넷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 및 지식재산권 정보화분야의 기술협력시 한국특허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

- 3극 특허청이 한국의 특허넷시스템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인정

특허청24시

- 지재권 분야 국제기술표준의 제·개정시에도 3국 특허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 진행
- 한국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평가

한·베트남 특허청『특허협력협정』체결

- 동남아지역 특허심사서비스 수출 및 지재권보호기반마련 -

-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팜 딘 추옹(Pham Dinh Chuong) 베트남 특허청장과 5. 8(수), 하노이에서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한·베트남 특허협력협정에 조인하였음
 - 이번 협정은 베트남 국민 또는 거주자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에 대해 한국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체결한 것임
- 또한 한·베트남 양국 특허청은 점증하고 있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재권보호가 선결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지재권보호를 위해 인적, 물적교류 등의 지재권분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하였음
- 이번 베트남과의 특허협력협정체결은 한국특허청의 특허심사의 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 베트남 특허청이 자국의 국제출원에 대해 한국특허청이 심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한국특허청은 '99. 12월부터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을 인정받아 국제조사(IsA) 및 예비심사기관(IPEA)으로 활동하고 있음
 - 작년 9월에도 한국특허청은 필리핀 특허청과 이와 동일한 특허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이번 특허협력 협정체결은
 - 그동안 내국인위주로만 제공되오던 특허심사서비스를 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이를 통해 외화획득은 물론 동남아지역의 특허심사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한국 특허청은 필리핀, 베트남외에도 말레이시아, 싱가폴등 ASEAN 전국가를 대상으로 특허심사 업무를 대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이 ASEAN 국가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 이 밖에도 양청은 양국간 투자 및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추진을 위해서 지재권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심사·심판관 교류, 지재권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개발사업,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특허행정정보 중장기 계획안 발표

특허청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3330여억원을 투자해 재해복구시스템과 통합CRM을 구축하고, 특허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넷 고도화 작업에 나선다.

특허청(청장 김광립)은 최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3330여억원을 투자해

- ▲ 기간시스템인 특허넷의 고도화
- ▲ 지식경영체계 강화
- ▲ 전자민원체계 강화
- ▲ 특허정보 활용확산
- ▲ 특허행정의 글로벌화 등 5과제 중점과제를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한 특허행정정보화 중장기(2002~2006년) 계획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특히 특허넷 고도화를 위해 재해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SAN(스토리지중심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등 IT물적기반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허관련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민원체계를 강화키로 하고 콜센터·인터넷·캠페인 관리시스템 등 특허 상담 및 신청과 관련된 모든 창구(채널)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통합CRM 환경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CRM은 최근 들어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과 공공분야를 통틀어 아직 국내에 도입 사례는 없는 상황이어서 한층 주목된다.

특허청은 또한 기업의 경영 및 투자전략 수립과 국가 경제정책 수립 등에 특허정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17개인 지역 특허정보센터를 2004년까지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개 과제를 선정해 특허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허정보의 종류도 2004년까지 15종을 추가하는 등 특허정보 이용 확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강열 특허청 정보기획담당관은 “지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총 769억원을 들여 1차 특허행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1133억원들여 2차 사업을 추진, 특허넷 등 특허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중장기 계획안은 지난 1,2차 사업에서 마련한 특허정보체계를 산업전반에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